

제 구조의 틀을 바꾸는 커다란 작업인 만큼, 정부는 민간 부문에서도 정부의 정책 방향에 부응하여 자본재 산업의 육성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 특히, 자금과 인력이 풍부한 대기업 집단을 중심으로 민간 부문에서 자율적으로 계획을 수립·추진해나가는 앞선 모습을 보여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

철강 산업

안영기

통상산업부 철강금속과 과장

1995년의 회고

1995년 우리 경제는 1993년 4/4분기 이후 지속적인 경기 호황이 유지되어 9%대의 높은 경제 성장을 기록하였으며, 철강 수요 산업의 활황에 힘입어 철강 내수도 큰 폭의 신장을 보였다. 한 해 동안 철강 업계에서는 한보철강이 전기로 방식으로 핫코일을 생산할 수 있는 Mini Mill인 당진공장을 1단계 준공하는 등 철강 업계의 본격적인 설비 투자가 이루어져, 철강 제품의 지속적 안정 공급을 기할 수 있게 되었다. 또 포항제철이 차세대 제철 기술인 용융 환원 제철 기술(FINEX)의 중간 완성 단계인 COREX공법에

의한 제철 공장을 준공하는 등 설비 능력 확대와 함께 제철 기술의 혁신이 이루어진 해로 특징지을 수 있다.

세계 철강 소비도 1993년 이후 성장세를 지속하여 1994년에 비해 1.7% 증가한 것으로 추산되는 등 전반적인 호황을 누리는 가운데, 원료인 고철과 합금철 가격이 상승하였으며 핫코일, 냉연 강판 등 일부 품목에서는 공급 부족 현상을 보이며 국제가의 상승 추세를 나타냈다.

1996년의 정책 방향

1996년 여건을 보면, 경제 전체적으로는 연간 7.5% 내외의 경제 수준을 이룰 것으로 보여, 과열이 우려되었던 1995년의 9% 이상 고도 성장으로부터 안정 성장 국면으로 전환할 것으로 보이며, 철강 산업은 1995년보다 철강 수요 산업의 성장률이 둔화됨에 따라 1995년보다는 낮은 내수 증가율을 보일 전망이다.

이러한 최근의 경기 동향과 함께 우리 철강 산업에 영향을 미치는 세계적 철강 산업의 추세를 보면, 미국, EU, 일본 등 선진 철강국은 약화되어온 경쟁력 제고를 위한 합리화 조치의 일환으로 생산 설비 및 인원의 감축과 자동화 투자에 주력하고, 제품의 고급화 등 구조 조정을 추진하여 최근 상당한 성공을 거두고 있다. 또한 중국, 동남아시아 등 개도국들은 자국의 철강 설비 및 기술 개발 투자의 확대를 통하여 국제 시장에서의 진출을 강화함으로써 우리의 입지를 추격해오고 있다. 이와 함께 다음 세기에서 철강 기업의 생존 여부를 결정하

게 될 신제철 기술의 개발이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어, 기술 경쟁에서 탈락되면 다시 경쟁 대열에 합류하는 것이 불가능해져가고 있다.

철강 산업은 대량의 에너지를 사용한다는 것과 CO₂, NO_x, SO_x 등 화합물을 발생시키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 최근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지구 온난화 등의 세계적 환경 규제가 구체화되면 철강 산업에 상당한 영향을 주게 될 것이다. 또한 중량물, 대량물이라는 철강 제품의 특성으로 인해, 최근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물류 비용의 부담 증가와 유통 구조의 낙후로 인하여 물류 비용의 절감이 경쟁력 확보를 위한 중요한 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이러한 최근의 경기 동향과 철강 산업의 여건 변화에 따른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정부는 철강 산업 장기 비전을 지난해 말에 제시하였다. 이 장기 비전은 WTO 체제 출범에 따라 정부 지원을 통한 산업 구조의 고도화 전략이 제약을 받게 됨에 따라, 정부의 정책 방향을 업계에 전달하고 기업들의 공감대를 형성하여 장기 경영 전략을 수립하는 데 참고토록 하기 위한 것이다.

향후 중장기적인 철강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본 방향은 기업이 자체 노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정부는 철강 업계의 애로 사항을 해결하는데 주력하는 것이며, 그 주안점을 적정 공급 능력의 확보, 생산 공업별 투자 방향 제시, 고부가가치 제품의 생산 확대를 위한 생산 구조 개편의 유도과 혁신 철강 기술 개발의 투자 확대, 효율적인 물류 및 유통 체계 구축, 환경 친화적 철강 산업 기반의 구

축, 철강 산업의 국제 협력 강화를 통한 안정 기반 구축 등에 둘 것이다.

적정 공급 능력의 확보를 위해 민간 기업이 자율적인 설비 투자를 유도할 수 있도록 정부는 철강재 장기 수급 전망 자료를 정기적으로 제시하고, 철강협회 내에 회원사 등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철강설비투자협의회 활동을 더욱 활성화할 수 있도록 민간 기업의 자율 투자 조정을 유도해나갈 계획이다. 설비 투자를 촉진해야 될 분야를 중심으로 세제 금융 지원 방안을 강구해나갈 것이며 특히, 자동차, 조선, 자본재 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으로 수요 증대가 예상되는 후판, 선재 등의 투자를 유도해나갈 것이다.

생산 방식별 투자 유도를 위해서는 고로법의 경우, 세계 온난화 환경 규제 강화와 혁신 철강 기술 개발을 감안하여 설비 투자를 지양토록 하고, 고철을 이용한 판재류 생산 공법인 Mini Mill공법의 설비 투자를 유도하며, COREX공법은 철원 확보를 위한 설비 투자 방향으로 유도해나갈 것이다.

고부가가치 제품 생산 확대에 필요한 생산 구조 개편을 유도하기 위해서, 한국철강협회가 주축이 되어 철강 업계가 자율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철강 21세기 운동을 1995년까지에서 1998년까지로 3년 연장하여 보다 활발히 추진되도록 할 계획이다.

혁신 철강 기술 개발의 강화를 위해서는 철강 업계의 연구 개발비 투자 확대를 유도하는 한편, 혁신 철강 기술의 조기 실용화를 위한 기술 개발을 가속화할 수 있도록 미분광 사용

이 가능한 용융 환원 제철 기술(FINEX)의 개발 및 설비 투자가 확대되도록 할 것이며, 1995년까지 계획되었던 정부의 지원을 1998년까지 연장하여 지원을 확대할 것이다.

철강 제품의 물류 관련 제도의 개선 차원에서 선적 운영권 민영화, 도선사 독점권 완화, 하역 효율 협의 체제 등을 추진하고, 적기 수송 및 운임 절감을 위한 해송 비율 확대의 여건을 확충해나갈 것이다. 이와 함께 수요자의 욕구 충족 및 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철강 유통 업체의 설비 합리화를 기할 수 있도록 하며, 철강 공단 인근의 도로, 항만, 공업 용수 등 주요 사회간접 시설을 확충해나갈 것이다.

환경 친화적 철강 산업 기반의 구축 확대를 위해서는 일관제철소를 중심으로 청정 연료인 LNG 사용 비율을 확대해나가도록 하고, 재생 자원을 이용하여 고품질의 철강을 생산하기 위한 신제강 공정 기술 개발을 적극 장려해나갈 것이다.

다자간 철강 협상(MSA)에서 사기업의 반경쟁적 행위 규율 등에 대한 각국 입장 변화를 포함한 추진 동향을 점검하고, 유사한 입장의 일본 등과 공동 대응하여 우리의 입장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지속할 것이다.

이외에 불투명한 국제 원자재 공급 사정에 대응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원료 공급 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철광석, 원료탄, 고철 등 원자재의 기본 관세(1%) 부세화를 추진하고, 베네수엘라, 브라질, 호주 등을 대상으로 고철 대체재인 HBI, DRI의 해외 현지 생산 체제를 구축하도록 유도해나갈 것이다.

지난해와 비교하여 1996년에 중점적으로 추진될 정책 방향은, 철강 산업의 적정 설비 능력 유지와 함께 경제 전반의 연착륙을 유도하기 위한 설비 투자의 차질없는 추진이 이루어질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도록, 기업의 해외 자금 조달 여건을 개선하는 방안을 관련 부처간에 협의·추진할 것이다. 특히, 1987년 이후 불허되고 있는 일반 기업의 상업 차관 허용을 추진하고, 해외 증권의 발행 한도·용도 제한·사용 절차의 규제를 완화해갈 것이다. 이와 함께 현재 운영되고 있는 해외직접투자지원제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한국수출입은행의 해외 투자 자금의 연간 한도를 4,000억 원 수준에서 4,300억 원 수준으로 확대할 것이다. 또한, 원자재의 기본 관세율의 부세화가 1997년부터 시행될 수 있는 준비를 해나가야 할 것이다.

조선 산업

김진선

통장산업부 자동차조선과 사무관

1995년의 회고

1995년은 연초 기대했던 시황 회복과 선가 상승은 거의 세자리 걸음을 하고 있

는 중에도 1994년보다 많은 수주량 달성과 우여 곡절 속에서도 부분규로 끝난 임금 및 단체 협상 타결, 엔화의 절상에서 절하로의 반전, OECD 多者間 조선 협정 시행을 앞두고 국내 이행 법률의 제정, 조선 설비 증설의 본격화 및 이로 인한 통상 문제 대두 등 국내 외적으로 많은 변화가 있었던 한 해였다.

1995년의 세계 조선 시장은 유조선 시장이 침체를 보인 반면, 建貨物 시장의 호조로 전체적으로는 1994년과 비슷한 수준을 보였고 선가는 다소나마 개선되었다.

1995년 9월 말 현재 세계 신조선 발주량은 1,728만 7,000 GT로서 지난해 같은 기간의 발주량과 비슷한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선종별로는 기대했던 초대형 유조선(VLCC)의 발주가 일어나지 않은 대신 벌크캐리어와 컨테이너선이 붐을 일으켰다. 1995년 9월 말까지의 국가별 수주 점유비를 보면 한국이 32.7%, 일본이 32.3%로 우리나라가 미미하나 1위를 지키고 있다. 그리고 AWES(서구 조선공업회: 14 개국)가 15.6%, 중국, 미국 등 기타 국가가 19.5%를 각각 차지하고 있다.

선가는 1991년부터 1995년 상반기까지 계속 낮은 수준에 머물렀으나, 하반기부터는 다소 상승 기미를 보이고 있다. 1995년 1월과 7월의 선가 수준을 보면 1월에 8,200만 달러였던 VLCC가 7월에는 8,500만 달러, 7만 DWT급 벌크캐리어가 2,700만 달러에서 2,900만 달러로, 2,500 TEU급 컨테이너선이 4,000만 달러에서 4,500~5,000만 달러로 각각 상승하였다.

이와 같은 세계 시장 가운데 1995년 11월 까지 국내 조선 업체가 수주한 선박은 616만 GT로서 1994년 같은 기간보다 33.6%가 증가하였다.

이상의 1995년도 조선 산업을 요약하면 세계 발주량은 橫步, 우리의 수주량은 증가, 선가의 微騰, 일본과의 1위 경쟁 계속 등이다.

1996년의 정책 방향

1996년도는 세계 조선 산업이 새로운 전환기를 맞이하는 해라고 보여진다. 이는 1994년에 타결된 OECD 다차간 조선 협정(상업적 선박 건조 및 수리 산업의 정상적 경쟁 조건에 관한 협정)이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이 협정은 '보조금 철폐'와 WTO의 반덤핑 제도에 해당하는 '피해가격제도 도입'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어 국가별로 차이는 있겠지만 협정 시행과 함께 새로운 정책 방향의 틀을 짜야 할 것이다.

정부 보조금을 지급하는 EU 국가들은 보조금 제거가 급선부이겠지만, 우리는 수출선 건조가 많기 때문에 피해가격제도에 의한 재소가 없도록 하려는 사전 노력이 필요하다. 정부는 국가간 통상 협력 관계를 한층 강화하고, 업계에서는 철저한 원가 분석은 물론 국제 조선 시장에서 덤핑 가격으로 수주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정부에서는 조선 협정의 국내 이행을 위한 법률안(조선 산업의 정상적 경쟁 조건에 관한

법률안)을 1995년도 정기 국회에 상정하여 11월 말에 통과되었고, 협정문에 대한 국회의 비준 동의도 얻었다.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정상 가격 이하로의 선발 판매(피해 가격 행위)의 금지, 정부 지원 조치의 금지, 협정으로부터 발생하는 분쟁과 관련한 해결 절차, 조선업자의 각종 자료의 제출 등을 규정하고 있다.

협정의 1996년 1월 발효는 모든 체약국이 비준서를 1995년 내에 OECD 사무국에 기탁하면 발효되지만, 하나의 국가라도 1995년 내에 기탁하지 못하면 최종적으로 기탁되는 시점부터 30일 후에 발효된다.

또 1996년은 우리의 설비 증설이 상반기에 모두 완료되어 가동에 들어간다. 조선 설비 증설 억제 조치가 1993년 말에 종료되면서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한라중공업 등 대형 조선업체는 1994년 초부터 도크 증설에 나섰다. 그 규모는 선발 길이가 330m인 초대형 유조선(VLCC: Very Large Crude oil Carrier)을 건조할 수 있는 대형 도크 5개이다.

이러한 우리의 설비 증설에 대해 미국, 일본, EU 등에서는 향후 세계 조선 능력 과잉으로 세계 조선 산업에 불황이 도래할 것이라는 이유로 증설 억제 또는 중지를 강력하게 요구해왔고, 더욱이 정부가 재정적인 보조를 지급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조선협정문에 임의적인 설비 증설을 규제하는 내용을 추가하자는 의견까지 제기되었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조선 설비 증설에 정부가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사항은 없으며, 또 업계의 설비 증설에 대해 정부가 이를 규제할

제도적 수단이 없고, 우리 정부도 세계 조선 산업에 불황이 초래되는 것을 원치 않고 있어, 향후 불황으로 인해 국내 조선소들의 경영이 악화되더라도 OECD 조선 협정에 따라 정부는 재정 지원을 하지 않을 것이고, 동협정 이행에 최선을 다할 것임을 밝히는 등 통상 문제에 적극 대처하였다. 이제 조선 협정 이행과 관련한 조치 이외에 정부의 규제나 간섭은 없다. 따라서 기업 경영에 대한 의사 결정은 앞으로도 각 기업의 판단 하에 수행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도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미래를 보다 정확히 예측하는 지혜를 가지고 경영에 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설비를 증설하였다고 해서 매출이 증가하고 이익이 늘어나는 것은 절대 아니다. 필요한 인력과 자재가 조달되어야 하고 경쟁력을 갖춰야 한다. 이러한 사항들을 원만히 극복하지 못하면 설비 증설이 오히려 기업 경영에 타격을 주는 요인이 된다.

1996년에 달라지는 또 하나의 제도는 중고선박 수입의 대폭 확대이다. 지금까지는 중고품수입제도를 'Positive System' 즉, 대부분의 중고품 수입을 금지하고 일부 제한적으로 수입을 허용하는 제도로 운영해왔다. 그러나 이는 국내 수출 산업 등 관련 산업의 대외 경쟁력 저하, 기업의 시설 투자 애로 및 이로 인한 업계의 불만이 야기될 소지가 있고, 대외적으로 중고품에 대한 수입 제한은 WTO의 수입허가절차협정에 저촉되는 것으로 추정되어 'Negative System'으로 제도를 개편한다.

따라서 국민 보건, 위생, 안전, 환경 등 국

제 규범상 정당성이 확보될 수 있는 최소한의 품목을 제한 품목으로 운영하고 대부분의 품목은 수입이 개방된다. 선박 부문은 안전성이나 해양 환경을 저해할 수 있는 일정 선령 이상의 노후 선박과 중소 조선소가 주로 건조하는 소형 선박(화물선류)을 제외하고는 수입이 개방된다.

중고 선박은 그동안 단계적으로 수입폭을 넓혀왔기 때문에 이번의 제도 개편으로 조선 업계에 미치는 영향은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며, 오히려 해운 업계의 원활한 선박 확보가 해운 산업이 발전할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면 장기적으로 조선 산업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21세기를 앞둔 시점에서 또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고 있다. 우리의 조선 산업이 21세기를 지향하고 안정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기술 발전을 가속화해야 한다. 기술 발전은 조선 경쟁국인 일본을 주시할 필요가 있다. 일본의 조선 기술은 몇가지 방향으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첫번째가 차세대 선박 개발이다. 현존하는 화물선 가운데 가장 빠른 선박이 컨테이너선으로서 25~27 노트(시속 46~50km)인데 비해, 일본이 개발 중인 초고속 화물선(테크노슈퍼라이너: TSL)은 1,000 개의 컨테이너를 적재하고 50 노트(시속 93km)의 속도로 항해할 수 있으며, 급세기 안에 상용화를 목표로 1995년에 해상 시운전을 마무리했고, 자장을 이용한 초전도전자추진도 시험 운항을 마치고 21세기 조선 시장을 겨냥하고 있어 이들의 기술 개발 노력을

가히 짐작할 수 있다.

아울러 공장 내 자동화 즉, 절단 도장 용접 분야의 인력 절감화도 우리보다는 한발 앞선 것으로 평가된다. 이러한 기술은 건조 공정과 원가를 줄이는 기술이며 경쟁력을 높이는 요소가 된다. 설계와 생산을 컴퓨터로 연결하는 전산화 시스템(조선CIMS)도 5~6 년 전부터 진행하고 있다.

우리가 양적으로 일본과 대등한 수준이라고 결코 만족해서는 안된다. 韓日間 기술의 차이는 현실이며, 이 현실을 타개하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

우리나라의 조선 산업은 4~5 개의 대형 조선 업체가 대표한다고 할 수 있다. 이들 대형 조선 업체가 우리나라 선박 건조량의 90% 이상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만큼 중소형 조선 업체는 영세하다는 뜻이다. 중소형 조선 업체는 대형 조선 업체와는 달리 기술, 설비, 인력, 경쟁력 등 모든 분야에서 극히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어 세계 상위 조선국이라는 이미지를 벗어날 수 없다. 이들 중소형 조선 업체가 부딪히고 있는 문제는 기술력 제고, 인력 확보, 설비 개선 등 여러 가지가 있지만 무엇보다 조선소 이전을 위한 입지 확보 문제이다.

전국 해안에 산재해 있는 많은 소형 조선소들은 도시 계획 변경, 해안 매립, 조선소 주변의 주택 단지화, 도로 개설 등으로 부득이 이전할 수밖에 없지만 중소기업으로서는 마땅한 이전지를 찾지 못하고 있고, 적정 입지를 찾았다고 하더라도 수자원 보호 지역, 농림 지역 등 각종 규제에 묶여 있어 조선소 설립이

원활하지 않다. 1995년에 이어 1996년에도 계속하여 이 과제 해결을 위해 최대한의 행정력을 투입할 계획이다. 입지 문제는 관련 법규와 기관이 많아 1~2년 내에 해결되지 않는 경우가 많으므로 장기간 시간을 가지고 관계부처, 시·도와 협의·추진해나가고자 한다.

앞으로 통상산업부에서는 조선업을 영위함에 있어 발생하는 애로 요인(환경, 입지, 수출여건 등)을 지속적으로 발굴·개선하여 경쟁력이 제고될 수 있도록 하면서, 국가간 협력을 확대하여 통상 관계를 원만히 유지해나갈 것이다. 한편, 업계에서는 진보 기술 주도를 위한 기술 개발 투자의 확대, 산업 평화 정착을 위한 노사 안정 추구, 생산성의 배가 그리고 기자재 업계, 중소 조선 업계 등 연관 산업과의 동반자적 관계 개척, 업계의 화합과 공정 경쟁 등의 역할 수행이 요구된다.

소프트웨어 산업

선일영

정보통신부 정보통신진흥과 사무관

1995년의 회고

1995년은 소프트웨어 산업의 발전 과정에 있어 하나의 큰 획을 긋는 분기점이

되는 해였다. 그동안 소프트웨어 관련 업무는 과학기술처, 상공부, 체신부 등으로 나뉘어 추진되어온 관계로 장기 비전의 제시와 통일되고 일관성있는 정책 수립 및 시행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었다.

그러나 1994년 말 정부 조직이 개편되면서 정보통신부가 발족되고 소프트웨어 산업 정책이 정보통신부로 일원화되어, 본격적인 소프트웨어 산업 육성 정책의 태동을 예고하는 시발점이 되었다.

과학기술처와 통상산업부로부터 소프트웨어 관련 조직을 흡수한 정보통신부는 1995년을 소프트웨어 산업 진흥의 원년으로 정하고, 매년 1,000억 원 이상의 자금을 투입하여 종합적·체계적으로 육성할 소프트웨어 산업 종합 육성 계획을 수립하였다. 그리하여 소프트웨어 기술 개발 투자의 획기적인 증대와 2~30대 젊은층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체제를 마련하여, 소프트웨어 업계의 애로 사항을 효율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기반 시설의 확보가 가시화되었다.

그리고 새로운 정보 통신 환경에 효과적으로 적응하고 정보화 촉진과 정보 통신 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정보화 촉진 기본법이 제정되었으며, WTO 체제 출범과 세계 지적재산권 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컴퓨터 프로그램 보호법을 개정하고, 국내 소프트웨어 개발 촉진과 관련 기업의 체계적인 육성 지원을 위하여 소프트웨어 개발 촉진법을 개정하였다.

1995년에는 정보통신부 출범과 함께 소프

트웨어 산업 육성을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한다는 새로운 의욕과 각오로 이 산업의 육성 기반을 마련하고,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지원 체제 정립과 소프트웨어 산업에 대한 국민적 인식 기반을 다져 21세기를 준비하는 데 정책 방향의 초점을 두었다. 따라서 1995년은 우리 소프트웨어 산업의 본격적인 발전을 위한 토대를 마련한 한 해였다고 볼 수 있다.

1996년의 정책 방향

이와 같이 1995년이 소프트웨어 산업 진흥의 원년으로서 제도 기반을 마련한 한 해였다면, 1996년은 1995년에 마련한 시책을 구체화해나가는 한 해가 될 것이다.

관련 법규의 정비

1995년에 개정한 소프트웨어 개발 촉진법 및 컴퓨터 프로그램 보호법의 후속 조치로 관련 시행령을 개정할 예정이다. 특히, 소프트웨어 개발 촉진법은 법 자체를 전면 개정할만큼 시행령도 비현실적인 조문을 과감히 삭제하고 신설된 조항의 입법 취지를 충분히 살릴 수 있도록 전면적으로 개정할 것이다.

또한, 개정 법률 제10조에 의한 소프트웨어 사업 대가 기준을 산업계 현실에 맞게 정비할 계획이다. 최근 전산화 사업의 용역 패턴이 토털 솔루션(Total Solution)을 지향하고 있고, 데이터 베이스 산업이 날로 발전하고 있어 텍스트 위주의 현행 기준으로서는 변화된

환경을 수용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므로, 전문가 용역 연구와 産學研 관계자들의 의견 수렴을 통하여 새로운 컴퓨터 기술 및 이용 환경에 적합한 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 기준도 정비할 계획이다. 정부는 기술이나 품질보다는 가격 위주의 공공입찰제도가 품질이나 기술 향상을 저해한다는 점을 착안하여 기술·가격분리입찰제도와 종합낙찰제도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하였지만, 소프트웨어의 경우는 품질 또는 기술을 평가할 기준이 없어 제대로 시행되지 못한 실정이었다. 정부는 개정된 소프트웨어 개발 촉진법에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 기준을 제정할 근거를 두었으며, 同법이 시행될 1996년 7월 이후에는 소프트웨어의 기술성 또는 품질을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시행할 예정이다.

소프트웨어종합육성센터 설치

소프트웨어 산업은 지식 집약적 산업이다. 따라서 제조업처럼 공장이나 시설보다는 아이디어와 저작 활동에 의존하게 되며, 반드시 대규모 집단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점이 특징이다. 특히, 게임 등 범용 패키지 소프트웨어는 소규모 집단이 개발하기 용이한 분야이다. 소프트웨어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다양한 아이디어를 가진 소규모 집단이 많이 생겨서, 고객의 요구를 충족시킬 다양한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어야 할 것이다. 소프트웨어종합육성센터는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용이하게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소프트웨어 산업의 획기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지원제도이다.

이러한 소프트웨어종합육성센터가 설치되면, 개발자는 이 센터에 비치되어 있는 소프트웨어 개발을 위한 고가 장비나 툴(tool)을 이용할 수 있어, 개발 비용을 절감하고 제품의 품질을 향상시킬 수 있고, 인터넷 등에 공개된 소프트웨어 모듈을 사용하기 쉽게 재정리 및 데이터 베이스화할 수 있으며, 구입 비치된 멀티미디어 관련 모듈도 활용할 수 있다. 또한 국내외 기술 자료 및 해외 유명 패키지의 분석 자료, 국내외 시장 정보 등 소프트웨어 개발에 필요한 각종 정보를 수집·제공함으로써, 자료의 구입 및 분석에 소요되는 시간과 개발 비용을 절감하여 소프트웨어 산업 경쟁력의 획기적 제고를 위한 지원이 가능케 될 것이다.

아울러, 센터는 기술력있는 창업 예비자를 육성하는 창업 보육 기능과 중소기업체들의 기술력 향상을 위한 기술 교육장 및 개발된 소프트웨어를 홍보할 수 있는 전시관의 역할도 담당하게 될 것이다. 이 센터는 소프트웨어 개발자가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교통이 편리하고 개발자가 밀집해 있는 곳에 우선적으로 설치할 예정이다.

1996년에는 50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1차 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며, 매년 설치 장소를 확대하여 장기적으로는 전국 주요 도시에 소프트웨어 개발 지원 환경을 조성해나갈 계

획이다.

컴퓨터 게임 산업의 본격 육성

1996년은 컴퓨터 게임 산업 분야 도약의 전기를 마련하는 한 해가 될 전망이다. 정부는 그동안 IT산업 발전의 최대 장애였던 부정적인 이미지를 불식하고 멀티미디어시대의寵아인 게임 산업의 육성을 천명해왔다.

이를 위해 게임 산업에 대한 각종 규제, 기술 수준의 열세, 인식의 미비 등 게임 산업 발전의 각종 장애 요인을 분석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으며, 체계적인 게임 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이 연구가 완료되는 1996년 상반기에는 게임 산업의 발전을 위한 본격적인 마스터플랜이 마련될 것이다.

시스템 통합 산업 육성

정보화의 요구는 개인적 정보 수요의 요구와 최적 정보 처리 시스템의 요구로 나타난다. 특히, 최적 정보 처리 시스템의 경우 행정조직, 기업 조직 등 거대 조직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경영하는 시스템 구축을 위한 고도화·전문화 기술이 요구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시스템 통합 사업이 크게 성장하고 있다.

시스템 통합 사업은 우리나라의 정보화 시스템 구축에 지대한 공헌과 비약적인 발전을 해왔으나, 전문 인력의 부족, 기술 수준의 낙후 등 문제점이 상존하고 있어 1997년으로

다가온 조달 시장 개방시 선진 시스템 통합 사업체와의 경쟁이 예상되는 등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

정부는 1996년 중에 시스템 통합 사업자를 분야별로 전문화하는 시스템 통합 산업의 육성과 경쟁력 확보를 위한 대책 마련에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기타 육성 시책

소프트웨어 기술 개발의 지원은 1996년에도 1,000억 원 이상을 지원하는 등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특히, 정보화촉진법 및 동법 시행령에 의하여 정보화촉진기금이 설치되었으며, 기술 개발 자금의 지원 방법도 종래의 정책 지정 방식에서 공모 방식으로 전환하여 경쟁 체제를 확충함으로써, 기술 개발 투자의 효율성 제고를 도모하게 될 것이다. 新소프트웨어상품대상제도는 그간 새로 개발된 소프트웨어의 홍보에 기여해왔으며, 앞으로는 심사의 차원을 높여 소프트웨어 품질인증제도와 연계를 모색해나갈 예정이다.

또한 정보 통신 분야 병역 특례 추천권이 1996년부터는 정보통신부로 이관될 예정이다므로, 그동안 제조업의 일부분으로 추천되어 온 정보 처리 산업에 대하여 별도의 추천 기준을 적용할 수 있게 되었다.

정부는 정보 처리 산업의 특성에 맞는 추천 기준을 제정·시행함과 동시에 정보 처리 산업의 특성을 감안하여 추천 배정 인원의 확대를 모색해나갈 예정이다.

결론

1994년 말 정부 조직 개편으로 소프트웨어 산업 육성 업무가 일원화되고, 1995년에 발전 기반을 마련한 소프트웨어 산업은 1996년부터 육성 시책이 하나씩 가시화되어감으로써 2000년대의 소프트웨어 선진국 대열로 향한 힘찬 발걸음을 내딛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금은 국경없는 무한 경쟁, 기술패권주의, 지역 통합, 글로벌라이제이션 등 새로운 파도와 거센 바람이 세계 각국의 경제 질서와 산업 구조에 변화와 혁신을 요구하고 있다. 이제 세계는 19세기 후반부터 기반을 굳힌 현대 산업 사회가 수명을 다하고, 지금까지의 어느 문명 사회보다도 기술 의존성이 강하고 정보 산업 기술의 변화와 발전에 바탕을 둔 고도 정보화 사회로 급속하게 진입하고 있다. 이러한 때에 우리는 소프트웨어 산업을 21세기를 준비하는 국가 기간 산업, 핵심 전략 산업, 정보 통신 선도 산업으로 인식하고, 우리 민족 특유의 두뇌력과 추진력을 자원으로 무공해의 고부가가치 산업인 소프트웨어 산업 진흥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1421**